

3조 1000억 규모 'AX 혁신 프로젝트' 본격화

〈인공지능 전환〉

호남·대경 등 4개 권역 거점 조성…과기부 보고회

광주에 생활밀착형 AI 기술 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정부가 내년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서 총 3조 1000억원 규모의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NIPA)은 11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2025년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연찬회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

해 성과와 내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5·3·3 특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4개 권역에 총 3조 1000억원 규모의 AI 혁신 거점 조성을 확정한 상태다. 내년에는

올해 지역 디지털 사업 성과에서도 호남권의 AI 적용 확산은 두드러졌다.

광주·전남에서는 농식품·해양 등 지역

생활·에너지·모빌리티 등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개발형 실증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거점을 통해 호남권 특화

산업과 연계한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연구 지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역 디지털 사업 성과에서도

호남권의 AI 적용 확산은 두드러졌다.

광주·전남에서는 농식품·해양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이 확산됐다. 식용곤충 생육 관제

기술을 고도화한 광주의 코리아노바(㈜), 기후변화 대응 김·전북 양식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

흥원 등은 지역 특화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부권·강원·제주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혁

신거점 추가 조성을 위한 기획 작업에

착수한다.

지역 산업 구조와 보유 인프라, AI 전

환 역량 등을 고려해 사업 타당성이 확

보되면 2027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

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도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장은 "세계는 이미 초거대 AI에서 피지컬 AI까지 영역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전쟁이 본격화됐다"며

"5·3·3 특지 지역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

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photo2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 11일 장흥군 부산면에서 열린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체육인재개발원 장흥서 개원…스포츠 미래 요람 기대

총사업비 415억원 들여 교육·숙박시설·실내체육관 등 시설 마련

국내 유일 체육인 종합교육 기반 구축…전남도 "성공 운영 최선"

전남도는 11일 대한체육회가 장흥에 대한 체육인 종합교육 기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흥민 대한체육회장과 체육계 주요인사, 전남도·시·군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

국 스포츠 미래의 요람으로서 첫 걸음을 축하고 비전을 응원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대한체육회에서 2020년 부지 선정을 전국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장흥군에서 유치했다. 장흥 부산면 지천길 52-25 일원에 총사업비

415억원을 들여 교육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관 등 체육인 교육을 위한 종합단지로 대한민국 유일의 체육인 종합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

체육인재개발원은 향후 국내 체육인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세로운 100년을 이끌 예정이다. 다양한 체육인 교육은 전국 체육인의 교류와 정보교환으로 운영되도록 전남도와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적 전남 관광지 방문 기회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한민국 체육인재

개발원이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아 스포츠 발전과 저변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남도와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
이 대통령 재가…내각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기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귀국 직후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면직안 재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 표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았다가 3시간가량 겹겹 조사했다. 연합뉴스

광주, 광융합·인공지능 기술 인프라 방위산업 확장

시. 방위산업 육성 산·학·연 전략회의 개최

'K-방산 세계화' 맞춰 지역방위사업 모색

광주시가 방위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목포 양그리아 비치호텔에서 '광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춘 방위산업 기획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케이(K-) 방산'을 세계화

하기 위해 국방부도체를 점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으로 규정하고 기술 국산화·자립화에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확대해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회의 첫날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 광주 방위산업의 세부 추진 과제, 군(軍) 수요 기반 과제 발굴 방위기업 수요조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승호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들은 특히 광주시의 광융합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를 활용, 국방부도체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광주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지역기업의 방위 기술 개발과 방위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도체 분야 육성

을 지역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앞서 '광주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지난달 2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손두영 시 미래산업총괄관은 "광주는

광·가천사업 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 중심으로 성장한 데 이어 방위산업까지

산업지향형을 확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추진한다. 행안부는 향후 조성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지역 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력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

이 되는 빙집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빙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돋는 새로운 거점으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

추진한다. 행안부는 향후 조성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지역 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력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

정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기재부 업무보고…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정부가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수도권 소재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폐교 출소 등을 활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

도권에 공공주택 2만 5000호 착공을 계획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기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의 테마세,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300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가치·활용도 적극 추진한다.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제값을 받고 처분되며,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5000개까지 단계적

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장을 촉진하고, 국

가계약 특례 신설·연계를 통해 공공부문

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강화한다.

신설하는 등 관련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연합뉴스